

## 내일부터 DMZ 문화재 실태조사... "평화지대화 기초자료로 활용"

문단 이후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DMZ)에서 문화재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접경·평화지역인 경기도·강원도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내일(26일)부터 1년여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조사 지역은 경기 파주 대성동마을로 내일부터 29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협의해 비무장지대 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왔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경기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조사대상별로 연구자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 2월 사전워크숍을 한 조사단은 내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에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40여 개소에 달합니다.

첫 조사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주민의 삶이 반영된 문화경관을 살펴보고, 군사분계선 인근 토성인 '태성'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 '평화지대화를 위한 첫 걸음' 비무장지대(DMZ) 문화재 실태 조사 시작

박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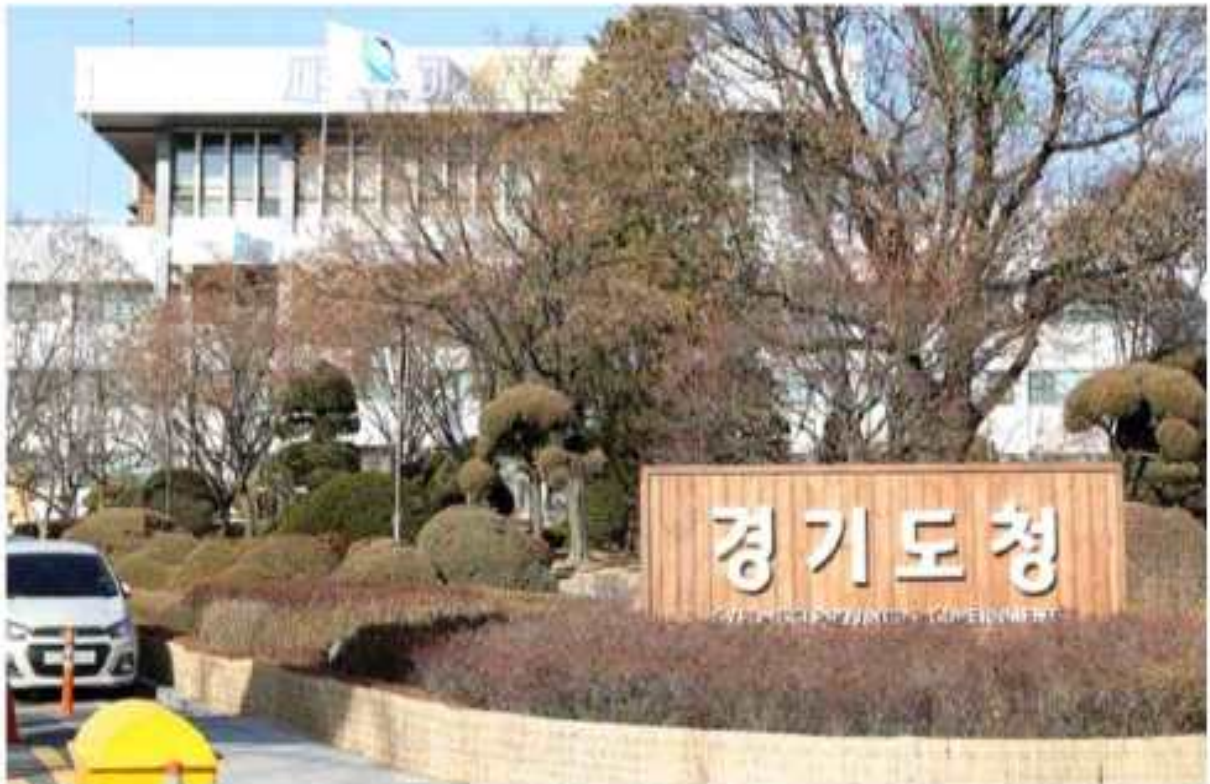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기 위한 문화재 실태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문화와 자연유산 실태조사 등 오는 26일 파주 대성동 마을을 시작으로 1년동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40여 개소에 달합니다.

이번 연구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의 조사단이 구성됐으며, 조사대상별로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강원도·문화재청, DMZ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는 강원도, 문화재청과 함께 내일부터 1년여간 DMZ에 대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  
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문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DMZ 전역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  
사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목 공동등재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  
습니다.

첫 조사는 DMZ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집니다.

## 문화재청, 비무장지대(DMZ) 문화재 실태 조사



문화재청이 경기, 강원도와 함께 내일(26일)부터 1년 여동안 비무장지대, DMZ에 대한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재청은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화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내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을 첫 시작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 등 40곳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비무장지대 문화·자연유산 종합 실태 조사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문화재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강원도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내일(26일)부터 1년여 동안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태봉 철원성을 비롯한 전통적 의미의 문화재는 물론 비무장 지대 안에서 유일하게 주민의 삶이 영위된 파주 대성동 마을의 문화 경관도 포함됩니다.

문화재청은 과거 비무장지대 내 문화재에 대한 간략한 조사는 있었지만,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 종합조사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지의 땅' DMZ 내일부터 문화재 실태조사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1년여간 총 40여개소 대상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26일부터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비극과 대립의 땅 DMZ에 대한 문화재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분단 이후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문화재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접경 평화지역인 경기도-강원도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1년여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번째 조사 지역은 경기 파주 대성동마을로, 오는 26~29일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국방부와 통일부, 유엔사와 협의해 비무장지대 문화재 실태조사를 준비해왔다.

문화재 조사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기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사전워크숍을 가진 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에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40여 개소에 달한다.

조사단은 첫 조사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주민의 삶이 반영된 문화경관을 살펴보고 군사분계선 인근 토성인 '태성'(台城)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지역의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DMZ 內 문화·자연유산 첫 종합조사 나선다

문화재청, 40여곳 대상 1년간 진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역 활용

김우영 기자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비무장지대(DMZ) 내의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가 나선다. 1년여간 진행될 조사는 한반도 공동경비구역, 강원 철원성, 고성 최동북구 군사보호지역, 대동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등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역을 우선적으로

남색이 걸려온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실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는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9월 진행되는 첫 번째 조사는 강원 강릉시 대성동 마을이다. 대성동 마을은 1951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회담에서 북한의 기정승 대원과 함께 애오차오천 휴전선에서 재확인됐다.

휴전 후에는 DMZ 내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을로 인정됐다. 풀밭이 자생한 자였고 체제 선의 유산으로 조지될 측면이 있어

발전적인 마을과 전방위 구획되는 특징을 가진다. 조사를 수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지 연구진은 "대성동 마을은 수백의 형태가 있고, 일련적으로 많이 뒤섞여 있는 것과 달리 서양식 건축의 특징을 보인다"며 "군단 생활이 가져온 독특한 문화환경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동 마을에는 산악시대 보석은 비록해 일제강점기 40여 년도 전교

문화재청과 "이후 삼천포시 등 문화유산이 유 문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서 DMZ의 가치를 높이고,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를 경계로 남한 대성동 마을과 북한 대동산 마을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 분단 70년 만에 DMZ 전역서 첫 문화재 실태 조사

분단 이후 70여년간 금단의 땅이자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던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걸친 문화재 실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200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문화·자연유산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1차로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파주 대성동마을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해

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조사대상별로 2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한다.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USM),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대동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40여곳이다. 앞으로 1년간 17차례에 걸쳐 경관 특성, 유무형 유산 요소, 자연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에서는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台城)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DMZ 전역의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로, 그동안 소외됐던 DMZ 내 문화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는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지난해 7월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녀 선임기자 [isun@seoul.co.kr](mailto:isun@seoul.co.kr)

## 경기도·강원도·문화재청 DMZ 자연유산 실태조사

경기도는 강원도, 문화재청과 함께 26일부터 1년여간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DMZ 전역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 조사는 DMZ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9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파주시), 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고성군),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되 개별 조사대상의 유형과 일정에 따라 매회 20여 명이 조사를 진행한다.

대성동 마을에서는 DMZ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조사단은 26일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이 밖에 실태조사 대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태봉혈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40여 곳에 이른다. /수원=김주홍 기자



## ‘미지의 땅’ DMZ 문화재 실태조사 착수

### 경기·강원·문화재청 협약 따라 파주 대성동마을 등 40곳 대상

경기도가 문화재청·강원도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

질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DMZ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문화재연구소, 파주시, 고성군을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한다.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일정 등에 따라 매회 20여 명 규모로 조사가 진행된다.

실태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

을 열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40여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비무장지대 내 문화·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종열기자 yiyun@sedaily.com

통일부·문화재청·경기도 '대성동' 방문

정부와 지자체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파주 대성동마을을 방문한다. 통일부와 문화재청, 경기도는 26일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다.

# 70여년간 미지의 땅 문화·자연유산 조사

## DMZ內 40여곳 재조명

이번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경기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조사대상별로 2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사전워크숍을 가진 바 있으며,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사 시 유의사항, 세부일정 등을 공유한 후,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

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개소에 해당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비무장지대 내 문화·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台城)'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될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해인기자

# 비무장지대 문화·자연유산 ‘현미경 조사’

道·문화재청·강원도 1년간 실시  
파주 대성동마을부터 ‘스타트’  
관문점 JSA·태봉 철원성 등 40곳

경기도는 문화재청, 강원도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문화·자연유산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 조사다.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며,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일정 등에 따라 매회 20여 명 규모로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 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파주 대성동마을, 관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곳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 될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ohoilbo.co.kr

##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DMZ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가 문화재청·강원도와 함께 4.27 관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분단 이후 70여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

구소·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한다.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일정 등에 따라 매회 20여 명 규모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관문점 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곳이다.

오석근 기자 demof@incheonilbo.com